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토론회

‘기독교 연합기관 재정운용의 현황과 과제’

기독교 연합기관 재정운용의 현황과 과제

일시: 2012년 6월 14일(목) 오후 2시

장소: 청어람 3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www.cfnet.kr

■ 진행 순서

□ 사회: 김상욱 간사(바른교회아카데미)

· 14:00 ~ 14:20

기조강연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 14:20 ~ 15:20

발제 1, 2 최호운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15:20 ~ 16:00

패널토의 김지방 기자(국민일보)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최호운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목 차

· 기조강연 3p

교회 연합기관의 바림직한 재정운용 |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 발제 1, 2 11p

기독교 연합기관의 재정관리 및 운용실태와 개선제안

| 최호운 회계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기초강연

교회 연합기관의 바람직한 재정 운용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종교사회학)

I. 들어가는 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상품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지상 목표인양 생각하는 등 자본주의 가치에 매몰되어 이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도전하는 것은 시도조차도 무의미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세속의 가치를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할 교회마저도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거액의 헌금으로 인해 재정 규모가 큰 대형 교회들은 작은 교회가 흉내 낼 수 없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구설에 오르기도 한다.

교회 헌금은 일종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자금으로서 시장 경제에 예속되지 않으면서도 사회를 튼실하게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공식 예산만으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진 기부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교단 총회나 교회 연합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연합 기관 역시 하나의 조직으로서 자체의 운영과 사역을 위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교회 연합 기관도 대부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드러진 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재정 역시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의미에 따라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교회들의 연합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직은 그 자체의 역학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사회조직으로서의 필요와 종교조직으로서의 거룩성이 불가피하게 충돌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조직 사회학의 관점에서 조직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 연합기관 재정운용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이 글에서는 사회학의 관점에서 교계 연합기관이 재정을 바람직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제도화의 딜레마

하나의 사회 운동은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세력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사회 운동과 공식 조직 사이의 구분은 모호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사회 운동과 사회 조직을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역동성 있는 사회 운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확고히 자리 잡게 되면 관료제적인 특성을 띄게 되기 때문이다. 보기를 들어, 구세군은 처음에는 사회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영구적인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찍이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는 현대의 모든 조직은 상당한 정도로 관료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관료제의 핵심을 사람에게 의한 지배가 아니라 규칙과 절차에 의한 지배로 보았는데, 모든 업무들이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통제되는 관료제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조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성을 위해 고안된 관료제가 처음의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 본래의 취지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관료주의’로 변질되어 모든 구성원들을 제도에 의한 희생물로 삼게 되는 쇠우리(iron cage)가 될 수 있음을 설파하였다.

이것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제도화의 딜레마’인데, 조직이 관료주의로 빠지게 되면 조직 자체의 존속과 기득권 유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관료제라는 개념은 종종 비효율과 낭비를 나타내는 단어인 관료주의와 관련되어 이야기되기도 하고, 처음 사용될 당시부터 경멸의 뜻이 담긴 말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일을 주어진 시간에만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파킨슨 법칙과 같이, 관료들은 계속 바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쓸데없는 일거리를 만들어 내고 아랫사람을 감독하기 바쁘다. 그리고 대부분 서류나 기록 작성, 파일 정리 등 원래 관료제가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들과는 거의 관계도 없는 것들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기도 한다.

베버의 관료제 모델에 따르면 권력은 조직의 정점으로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다. 커다란 조직은 하나의 피라미드와 같아서, 피라미드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처지에 있게 된다. 결국 조직이 대규모화되고 관료제화하면 할수록 조직의 상층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수중에 권력이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베버의 제자인 로버트 미헬스는 이러한 점에서 소수에 의한 지배는 대규모 조직의 관료제 성격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특성이라며 “과두제의 철칙”을 주창하였다. 미헬스의 연구는 독일의 사회 민주당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정치적 성공으로 당의 규모가 커지자 사회민주당은 자신들이 비난하던 보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파벌이 지배하는 당이 된 것을 보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적인 참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의미를 내포한다. 아무리 의미 있는 민주주의 조직이라도 결국에는 과두제화 될

* 이에 대하여는 Roberto Michels, *Political Parties*(New York: Free Press, 1967)을 볼 것.

수밖에 없다면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례들이 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주와 자본의 논리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도 실제 노동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스스로 관료제화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 조직에서도 수장이었던 총학생회장은 상당할 정도로 이상화 되었던 사례가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존재 의미가 되는 시민단체조차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을 분석한 논문에서는 적지 않은 시민 단체들이 시민들인 회원들의 참여가 부진하고 결국에는 소수의 직업 운동가들에 의해 예산을 포함한 중요한 안건들이 결정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관료제가 야기하는 또 하나의 결과는 ‘목적전치 현상’이다. 이것은 어떤 조직이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보다는 자체 조직의 유지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조직사회학 용어이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는 방식으로 의도된 프로그램이나 과정 자체가 그 조직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애초에 추구하던 목적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목적은 수단에 비해 우위에 있고 따라서 조직이라는 수단으로 하여금 이 목적에 언제나 봉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이 우위가 뒤집혀서 수단이 주가 되고, 목적이 여기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상태가 된다.** 특히,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관료주의화 되면 조직의 유지 및 운영 자체가 그 조직의 실제적인 목표가 되고 결국 본래의 목적보다도 조직의 성장을 중시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된다.

이러한 목적전치 현상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이나 공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자주 거론되기도 하는 등 대부분의 사회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니와, 종교 조직도 예외는 아니며 오늘 주제인 교회 연합 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각 기관에 따라 형편은 다르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 그 기관의 본래의 역할이나 본연의 임무보다도 조직 자체의 유지나 발전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보기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에서 ‘한기총’이라고 씀)라고 할 수 있다. 한기총 홈페이지에는 단체의 존립 목적에 대해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각 교단과 단체가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 연합하며 정책과 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회와 정부 및 국제 사회를 향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정책의 수립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본 연합회는 한국교회의 숙원인 '하나의 통일된 연합기관'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과 일치에 선도적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단체의 사명을 천명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박창호, “정보사회의 사회운동과 한국의 NGOs,” 『사회이론』, 2001년, 90쪽을 볼 것.

** N. J. Demerath and Phillip E. Hammond, *Religion in Social Context*(New York: Random House, 1969), 173-180쪽.

실제로 한기총이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다면 한국 교계에 대단한 기여를 했겠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체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마치 단체의 목적인 양 전도된 모습이다. 그리고 작년에 논란이 된 돈 선거는 그 치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교회 연합 기관은 본래의 설립 목적을 상기하고 조직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조직의 갱신과 재구조화에 대하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비영리단체로서 종교 단체의 재정 관리

1) 비영리단체 재정의 성격

이러한 제도화의 문제는 재정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정치」를 쓴 짐 월리스는 예산서는 단순한 서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정신이 배어 있는 도덕 문서라고 보았는데, 그것은 재정이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추구하는 가치에 입각해서 지출되기 때문이다. 곧 그 단체의 정신이 예산 문서에 가장 핵심적으로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들은 앞에서 살펴본 목적전치 현상에 따라 본래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본연의 역할보다는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주제인 교계 연합 기관의 재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영리단체가 아닌 다른 비영리단체들의 재정 지출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종교 단체는 영리를 추구하여 출자나 지분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는 단체가 아니라 이웃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과 같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타 비영리 조직에 준하여 재정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오늘 다루는 교회 연합 기관 중에는 일부 영리 기관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 영리 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비영리단체는 일반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사회복지 사업, 교육 사업, 학자금 지원 사업, 연구와 학술활동 지원 사업, 자선사업 등과 종교 사업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비영리단체들은 대개 시민사회단체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재정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통계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재정에 대한 파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통계자료에 의존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1998년 시민운동지원기금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환경, 여성, 소비자운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재정 및 모금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의 수입 현황은 회비 및 후원금이 41.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 한기총 홈페이지 <http://www.cck.or.kr> 를 참고할 것.

* 이에 대하여는 김정남, 「종교법인의 세무와 교회재정관리」(서울: 영문, 2004), 180쪽을 볼 것.

** 양교철, 「교회와 재정」(서울: 쿨란출판사, 2005), 518쪽.

지출에서는 인건비가 31.3%, 사무실 운영비가 12.2%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 중에 인건비 및 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도가 높은 몇몇 NGO의 활동과 재정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각종 성금을 모금해서 필요한 곳에 전달했던 방송국 모금의 경우에도 모금액의 절반 이상이 여러 가지 비용으로 지출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기부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어느 재단의 재정 보고를 보면, 2007년 모금액이 약 140억 원이고, 배분액은 약 80억 원으로 43% 정도가 운영비 등 부대비용(이익금 포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성금을 모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성금을 배분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정 보고를 보면, 총수익 3,000여억 원 중에서 배분액은 2,400여억 원이고 600억 원 정도가 기타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비율로는 20% 정도지만 그 액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러한 단체들이 모두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낭비한다거나, NGO에 종사하는 상근 근로자의 보수가 필요 이상으로 높고 사무실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 지출에서 애초에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보다 조직 유지를 위한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간혹 각종 연금 관리를 맡고 있는 공단들의 많은 예산이 공단 직원들을 위한 인건비나 직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나친 퇴직금 지급으로 사회에서 물의를 빚은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연금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2010년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세금으로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 금액은 일반인이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불입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수령액은 재임 기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현재 자기 부담 전혀 없이 단 하루라도 의원 배지를 달면 비리 전력과 무관하게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낯 뜨거울 정도이다.

2) 교회 연합 기관의 바람직한 재정 관리

기독교계에서 각 교단 총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문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작년에 한기총의 ‘돈 선거’가 논란이 되었고 최근에는 CTS 기독교 TV의 횡령 의혹과 한기총 비자금의 현 정부 유입 관련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특정 단체나

* 차명제 외,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방향과 과제」(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4), 148쪽.

** 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를 볼 것. 2009년 기준으로는 3,319억 원 모금액에 배부액 2,901억원으로 418억원이 기타 비용으로 사용되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박창호, “정보사회의 사회운동과 한국의 NGOs,” 「사회이론」, 2001, 83-84쪽.

**** 「주간 한국」, 5월 26일자.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웬만한 교단 선거에서도 금권 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재정 운용을 둘러싼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종교인들이 비종교인 이상으로 비도덕적으로 금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신성한 교회 재정을 운용하는 데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은 비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에 속한 기독교인들조차도 용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법인의 회계는 그 규모와 역할이 방대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의 중요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종교법인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는 주로 재무보고 절차에 의해 정보이용자에게 보고되므로 종교법인의 경우도 재무 상태와 운용 성과를 적절한 절차에 의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교법인은 신자들의 교화, 선교 및 기타 사회사업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일반 신자의 헌금, 기부금 등을 통해 조달하며, 자원제공자들은 일반적으로 제공한 자원에 대해 경제적 효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는 종교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닌 조직으로서 활동한다. 이런 점에서 종교 회계도 재정상의 효율적인 운용과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해 자선단체와 같은 수준의 조세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것은 종교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단체와 같이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영리 단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나 목회자가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표피의 문제이다. 설령 특정 교회나 목회자가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회의 활동이 공공성을 띄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 연합 기관도 단순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성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종교 단체의 특성상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본래의 사회 공익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재정의 투명한 운용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 투명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국제아동권리기관은 최근 5년간 모금액이 2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 김정남, 윗글, 183쪽.

10배 성장하였는데, 이 단체 회장이 말하는 성장의 비결은 ‘투명 경영’이었다. 투명 경영을 통하여 기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뢰를 받은 것이 성장의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그 기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중적인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 내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세금이 공적으로 엄격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교계 연합 기관의 재정 역시 대부분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 조성되고 헌금을 한 성도들은 재정 운용에 관심이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회 연합 기관 역시 좋은 평판과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굳건한 신뢰기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 연합 기관에 외부 재정 감사 제도를 엄정하게 시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외부 감사제를 도입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다면 이제라도 도입해야 하며 도입한 기관도 보다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 회계 감사 제도는 보고된 정보의 타당성, 공정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고안된 감시 시스템이다. 가장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죄 아래 있으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재무제표 자료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공공 기관들이 회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독립된 회계사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계 기관의 재정 운용에 부도덕한 의혹이 있다면 보다 엄정한 감사와 함께 비자금이나 횡령과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 자체를 단순화 시키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교계 기관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조직이나 조직 자체가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조직 문화가 위계질서를 강조하게 되면 상명하달 식의 피라미드형 조직이 되어 위에서 아래로는 신속하게 의사 전달이 되지만, 아래에서 위로는 언로가 차단되어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의사가 상층으로 전달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여기서 관료제적인 조직 구조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바뀌기 힘들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대 조직들은 더 작고, 빠르고, 창의적인 조직들과 경쟁하는 것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조직들은 내적인 공간을 재조직하고 있으며, 그 구조는 네트워크 형태로 변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각 단위의 재량권과 자율권을 중시하며 위계보다는 하의상달 의사 결정을 포함하는 민주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구조이다. 교계 연합 기관들도 보다 많은 사역을 효과 있게 담당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조직의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황호찬, “교회재정 투명성을 위한 제언,” 「공인회계사」, 2001년 6월.

4. 나가는 말

종교의 의미와 그 힘은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초월적 가능성에 있다. 종교는 종교 본연의 가치에 터하여 현존의 가치와 질서를 넘어서는 초월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는 오히려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어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교회 구성원인 신도들이나 조직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교회 연합 기관도 모두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경에서는 부자들에게 대하여 경고하며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자체의 운영과 사역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이다. 돈에 대해서는 초탈해야 하면서도 교회에 현금을 해야 하고, 교회나 교회 연합 기관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돈 문제를 은밀하게 다루기보다는 공론의 영역으로 끌고나와 떼떽하고 당당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포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근대 유럽의 청교도들이 실천했던 청지기로서의 삶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청지기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세계의 주인이시며 인간은 그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잘 다스려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 행위자로서의 기독교인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극복하여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모인 공동체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하며, 재정 집행의 대행자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의 연합 기관인 교계 단체들은 더욱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 재정에 어떠한 이기심도 개입하지 않고 신성한 이타심에 따라 집행될 때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공신력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이에 대하여는 로버트 벨라, 「사회변동의 상징구조」(박영신 옮김)(서울: 삼영사, 1981), 6장을 볼 것.

■ 발제 1, 2

기독교 연합기관의 재정관리 및 운용실태와 개선제안

최호운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들어가는 글

우리는 왜 연합기관에 관심을 가지는가?

기독교텔레비전(CTS), 찬송가공회, 성서공회, 국민일보, CBS, 극동방송....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공적 기관들이며,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들이다. 일반 언론, 출판사와는 달리 기독교를 내용으로 활동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내가 출자하지 않았지만, 내가 출연하지 않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 하지는 않지만 선교와 복음전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방송 채널과 주파수를 맞춘다. 기존에 사용하던 찬송가가 있었지만, 기존에 보던 성경이 있었지만 새로운 찬송가와 개정판이 나오면 부담이 되더라도 기꺼이 새 찬송가와 개정판 성경을 구입한다.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쌍방향적 관계이다.

‘찬송가공회 법인설립허가 취소’

‘CTS 회장 자금 횡령’

‘국민일보 파업’

‘한기총 금권선거’

기독교 관련기관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언론 기사제목들이다.

다른 기관들보다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며,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할 기독교 기관들이 연일 법정을 오가며 다투고 있건만 이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직접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관련 기관의 출자자가 아니니까 또는 출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자유한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을 표방하며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와 물질후원으로 성장하고, 활동하는 기관이라면 이는 한국교회와 교인 모두의 책임과 관심으로 돌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용어의 구분

일반화 되지 않은 용어이기에 먼저 용어의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 교회 연합기관: 지역교회, 지역교회 연합기구, 교단 등 교회조직이 연합한 기관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이하 ‘한기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단 등이다.
- 기독교 연합기관: 기독교인 또는 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합한 기관들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법적실체(Legal Entity)로서의 조직형태와는 무관하다. 교회 연합기관은 기독교 연합기관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을 표방
 - 일반 대중적 기독교인들의 기도, 물질 또는 구매 후원

본 발제는 많은 기독교 연합기관 중 일반 대중에의 영향력이 큰 기독교 언론, 성경 및 찬송가 출판, 그리고 스스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기총을 대상으로 재정운용 형태와 책무성을 검토하였으며, 검토는 대상기관에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하여 입수한 자료와 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CTS, 국민일보), 총회자료집(한기총)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조직구조와 운용구조

검토 대상인 기관들의 법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명칭	법적 형태	주요주주
기독교텔레비전(CTS)	주식회사	기감(40%), 예장통합(13.3%), 예장합동(9.2%), 기성(3.8%) 등
국민일보	주식회사	(재)국민문화재단(100%)
한국찬송가공회	재단법인	
극동방송	재단법인	
기독교방송(CBS)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적 형태에 따른 법적 의사결정 및 운영구조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

출연된 재산을 기본으로 조직된 법인이며,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즉, 이사회가 의사결정과 집행을 모두 담당하기에 이사회 중심의 운영구조이다.

법인의 운영은 재단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수입과 추가적인 기부금 수입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잉여금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이사회는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의사결정과 집행이 분리된 구조이며, 사원의 다양성과 관심부족으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도 있다.

법인은 기부금수입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잉여금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

자본을 출자한 주주들의 회의체인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주주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이사들이 집행한다.

출연재산과 후원금에 의존하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과는 달리 수익을 창출하는 매출활동에서 조달된 재원으로 운영하며, 잉여 수익금을 출자자들인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이다.

주식회사인 CTS와 국민일보의 수입구조와 순자산현황을 분석하면 누적 결손금으로 인해 출자자인 주주들이 배당 등 투자자금 회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수입구조 또한 매출 이외의 후원금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주주 구성 또한 개인출자자가 아니라 교단 또는 교회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형 비영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기부금과 자산수증익을 포함한 금액임

(단위:백만원)

	CTS	국민일보
이월결손금(2011/12/31기준)	(21,089)	(23,728)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5,021	52,081
최근 3년간 후원금(*) 평균	15,866	3,573

외형상 법적인 기준만으로 보면 상기 기관들은 주주 또는 이사들의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므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들의 파행적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관계 기준으로 보면 상기 연합기관들의 설립 기본재산 조성과정과 지속적인 자금 공급인 매출수입과 기부금 수입은 모두 한국교회 교인들의 지갑과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기에 상기 조직들은 폐쇄적 이익집단이 아니라 개방적 공공조직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한국교회 교인들의 청지기적 책임감을 방관할 수 없으며, 기독교 연합기관으로서의 책무성(Accountability)이 요구된다.

재정관리 투명성에 대한 입장

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5월 14일 결산서를 공시할 의무가 없는 기관(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부감사 받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에게 5월 25일까지 결산서 자료를 보내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요청에 대한 각 기관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찬송가공회: 답변 없음
- 극동방송: 답변 없음
- CBS: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하였으나 6/9현재 2010년까지의 매출액 현황만 공시되어 있음
- 성서공회: 결산서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답변
- 한기총: 결산서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답변

재정운영 내역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으로 보아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독교 연합기관이 스스로의 공공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관리의 투명성은 외부에서 유리창 너머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재정운용과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하며, 투명하다고 하여 반드시 적정하게 정확히 관리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투명성은 건강한 재정관리의 필요조건이며, 출발선이다.

주기적으로 연합기관들의 재정관리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왔다면, 의문사항에 대한 해결이 먼저 진행되었다면 횡령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적합성의 재정운용

재정운용의 목적적합성은 수익사업구조에서 수익관련 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의 관점과 후원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구별된다.

CTS의 최근 3년간 비용관련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매출액	원가	매출액대비 원가비율	판관비	매출액대비 판관비 비율
2009년	4,396	10,303	234%	10,103	230%
2010년	5,318	11,731	221%	8,107	152%
2011년	5,348	11,918	223%	8,281	155%
3년간평균	5,021	11,318	225%	8,830	176%

CTS의 재정운용은 매출은 광고와 프로그램 매출로 구성되며 시청자들로부터 직접 시청료를 매출로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직접비용인 원가가 매출액의 200%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할수록 적자의 폭이 커진다는 의미이며, 관리비 성격인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조차 매출액의 150%를 상회하는 것은 인건비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인 운영구조로 추정된다.

경영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CTS의 주주인 여러 교단을 포함한 한국교회 교인들의 지속적인 비용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영진의 자금 횡령사건은 더욱 CTS의 경영에 의혹의 눈으로 보게 한다.

국민일보의 최근 3년간 비용관련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매출액	원가	매출액대비 원가비율	판관비	매출액대비 판관비 비율	영업손실
2009년	53,826	38,567	72%	17,850	33%	(2,591)
2010년	54,180	38,793	72%	17,765	33%	(2,378)
2011년	48,237	34,672	72%	16,833	35%	(3,269)
3년간평균	52,081	37,344	72%	17,483	34%	(2,746)

국민일보의 매출액은 신문구독료 수입과 광고수입으로 구성된다.
 원가와 판관비 비중이 큰 변동 없으나 여전히 매년 영업손실이며, 영업손실액은 순복음 교회 등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보전되는 구조이다.

한기총의 전체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	지출	차액
2007년	3,295,316,732	3,034,249,061	261,067,671
2008년	1,894,650,700	1,548,279,712	346,370,988
2010년	2,176,037,635	1,656,258,658	519,778,977
2011년	2,185,770,615	1,642,183,615	543,587,000

(*) 수입금액에는 전기이월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계단위별로 편차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보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2010년 아이티 지진사태 목적후원금으로 294,226,230원을 모금하였으며 2010년에 104,997,379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89,228,851원은 2011년에도 집행되지 않은 잔액으로 이월되고 있다. 아이티 지진사태를 지원할 목적으로 후원한 성금은 전액 아이티 재난 지원금으로 즉시 집행되었어야 함에도 해를 넘긴 년도 도한 넘어가도록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음은 재정운용의 목적적합성이 부족하고 하겠다.

이와는 별도로 회관건립기금과 발전기금으로 적립한 기금을 2010년에 2억5천 만원, 2011년에 7억 1천 만원을 각각 본부경비로 전용(일부는 전입전출, 일부는 대여차입으로 정리)하였다. 2011년 발전기금회계에서는 본부에 대한 대여금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서가 정리되어 있으나 본부회계에서는 전입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양 회계단위가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는 사실은 자금 전용과정이 정상적인 재정운용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목적기금은 설정된 목적을 위하여 기금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목적기금의 전용이 인정되는데도 2010년과 2011년의 자금 전용은 목적기금 설정시 기금의 설정목적, 운용방법, 집행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규정한 기금관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기총의 특별기금회계가 아닌 본부계정의 총지출액 대비 사업비 집행액의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총 지출액	사업비 해당액	총 지출액 대비 사업비 비율
2007년	1,103,548,559	323,818,469	29%
2008년	1,265,657,253	475,345,282	38%
2010년	1,392,373,798	484,378,926	35%
2011년	1,394,285,432	365,475,607	26%
4개년 평균	1,288,966,261	412,254,571	32%

내부인력에 의존하기 보다 다양한 위원회조직과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하는 한기총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업비 집행액 비율이 높지 않으며, 단체 유지비용의 비중이 높다고 하겠다.

예산관리

예산은 기관의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를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을 요청하는 과정으로서 예산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즉, 승인 받은 예산은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의 출연자와 재정의 수탁관리자간의 약속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약속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의 약속변경(예산변경승인 또는 추가경정예산설정)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와 승인과정이 없는 것은 수탁관리 책임자의 월권행위가 된다.

또한, 예산은 특정인의 자의적인 재정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예산이 없으면 단체의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보다 실세 또는 목소리 큰 사람의 생각으로 재정이 운용되기 쉽다.

CTS와 국민일보의 경우 공시된 재무제표에 예산금액이 표시되지 않아 예산관리 기능을 검토할 수 없었다.

한기총의 승인받은 예산금액과 집행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수입(전기이월액 포함)			지출(차기이월액 제외)		
	예산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2007년	3,785,000,000	3,295,316,732	(489,683,268)	3,785,000,000	3,034,249,061	(750,750,939)
2008년	2,273,000,000	1,894,650,700	(378,349,300)	2,273,000,000	1,548,279,712	(724,720,288)
2010년	2,325,000,000	2,176,037,635	(148,962,365)	2,325,000,000	1,656,258,658	(668,741,342)
2011년	2,495,000,000	2,185,770,615	(309,229,385)	2,495,000,000	1,642,183,615	(852,816,385)

결의한 수입예산을 매년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산설정과 승인 과정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추론을 하게 한다.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설정된 예산의 경우 재정운용 과정 또한 구성원의 관심과는 무관하게 특정인의 자의적 판단에 기초하여 운용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한기총의 기금전용은 2010년의 경우 예산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2011년의 경우 승인받지 않는 예산외의 전용이다. 또한 2011년 예비비가 초과 집행된 사례가 보인다. 예비비는 예산 설정시 예상할 수 없는 항목 또는 금액을 감당하기 위한 여유분을 유보한 금액인데 이러한 유보금액(2,400만원)을 훨씬 초과한 1억7백만원 상당액을 예비비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은 수궁하기가 쉽지 않다.

기독교 연합기관에의 요청

기독교 연합기관의 재정운용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막막하였다. 공익법인일지라도 종교기관은 결산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관점에서 일반 비영리기관보다 더 폐쇄적인 연합기관들을 보며 우리에게 실정법 차원을 넘어선 공감대는 없는가? 법규정만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현대 교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인가 아니면 이사와 기적을 찾아 다니는 무리에 불과한가? 이 땅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하나님나라는 문자서류에 국한 되는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 되새기게 되었다.

기독교 연합기관들의 재정운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 기독교 연합기관의 정체성 인식

기독교 연합기관은 한국교회의 기도와 물질을 기초로 세워졌다. 법적 권리관계에 기초한 특정인 소유/관리하는 폐쇄적 기관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기독교인들의 연합구성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교회 교인들 또한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뿐만 아니라 감시자의 역할도 같이 감당하여야 한다.

2. 투명성확보를 위한 재정공개

기독교 연합기관을 기도, 물질, 구매 형태로 후원하는 한국교회 앞에 연합기관들은 재물의 수탁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입장에서 재정운영과정과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3. 목적적합성 관점에서의 재정운용

연합기관의 재정은 후원자들의 후원 의도와 일치하도록 재정이 사용되어야 하며, 연합기관의 재정관리자는 후원의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산을 진행하고, 후원자들이 이해하도록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예산통제

구성원과 참여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승인 받은 예산의 범위는 우선적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5. 수익사업 수익의 사회환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창출된 잉여소득을 한국교회를 위하여 환원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의 환원액은 잉여소득 분배차원이 아니라 필요 운영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나가는 글

여러 사람의 다리를 꼬집어 보아라.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 나의 신체의 일부분이다.
기독교 연합기관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가?

한국교회 교인들은 지역교회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지역교회에 집중되었기에 지역교회를 넘은 영역교회, para church 등 하나님나라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폐단으로 개교회 중심의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지역교회단위를 초월한 삶과 사회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 생각하며 무관심하게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교회는 구현되어야 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앞세운 모든 연합기관적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교회, 하나님나라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청지기적 주체적 관리자로서 회복되기를 바란다.

■ 패널토의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김지방 기자(국민일보)